
정책참고자료

2019-9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

- 복구비 1,853억 원 확정, 추경예산 940억 원 및 국민성금 470억 원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산불피해 극복 지원 -

2 국민권익위원회

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 보건복지부에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

3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전통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

- 시장의 특성화 성과에 힘입어, 전통시장 매출 4년 연속 상승세 -

4 교육부

진로체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공한다

-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사업설명회(4.30.) 열려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월 1일부터 4,200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 누구나, 무료로 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세요! -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분야 혁신 창업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통해 89개 사업 최종 선정 -

7 농림축산식품부

봄 여행주간, 강원도 농촌관광 어떠세요?

-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농촌관광객에 혜택 풍성 -

8 환경부

전국을 누비는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 본격 운영

- 전국 국립공원 주요 행사와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안내소 -

9 고용노동부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지속 증가

-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 -

————— 39

10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

————— 46

11 국토교통부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 서울-울릉 간 7시간→1시간...지역민 생활권역 확대·관광활성화 제고 -

————— 54

12 해양수산부

옥빛 봄바다 넘실... 체험거리 가득한 강원도 어촌여행

- 해수부·어촌어항공단, 강원도 지역 추천 어촌체험휴양마을 5선 소개 -

————— 58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

- 복구비 1,853억 원 확정, 추경예산 940억 원 및 국민성금 470억 원과
함께법정부 차원의 산불피해 극복 지원 -

□ 정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 동해안 일원에 큰 피해를 안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하여 4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복구비 1,853억 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대 순간풍속 131km/h의 양간지풍* 을 타고 빠르게 번져 피해가 확산되었다.

* 기압 배치가 남고북저일 때 양양-고성(간성) 구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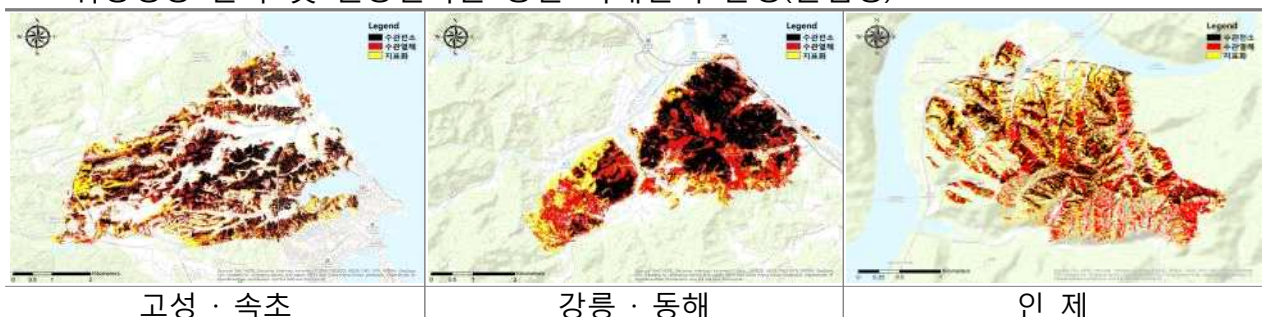
<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발생 개요 >

구 분	고성 · 속초	강릉 · 동해	인 제
발생일시	4.4.(목) 19:17	4.4.(목) 23:46	4.4.(목) 14:45
발생장소	강원 고성군 토성면	강원 강릉시 옥계면	강원 인제군 남면
진화일시	4.5.(금) 08:15	4.5.(금) 16:54	4.6.(토) 12:00

《 피해 현황 》

○ 이번 산불로 사망자 2명(속초 1, 고성 1), 부상자 1명(강릉, 2도 화상)과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4.29. 기준)이 발생하고 산림 2,832ha* 가 불탔다.

* 위성영상 판독 및 현장실사를 통한 피해면적 산정(산림청)



□ 총 피해액은 1,29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 원으로 주로 주거와 생업에 밀접한 시설 피해가 많았다.

○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등 공공시설에도 219개소, 988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현황 >

사유시설 피해(백만원)			공공시설 피해(백만원)		
시 설 별	피해물량	피 해 액	시 설 별	피해물량	피 해 액
계	4,461	30,278	계	219	98,838
인 명(명)	3	-	산림시설(개소)	11	23,425
주 택(동)	553	21,756	관광시설(개소)	31	31,100
농업시설(개소)	182	1,471	군사시설(개소)	94	9,885
축산시설(개소)	12	559	학 교(개소)	4	669
산림시설(개소)	1	9	상하수도(개소)	48	280
기 타(개소)	3,710	6,483	기 타(개소)	31	33,479

《 복구계획 수립 과정 》

□ 정부는 극심한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6.)하여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먼저, 주불 진화가 완료된 4월 6일부터 복구계획의 기초가 되는 지자체 피해조사(4.6.~4.15.)에 착수하고 행안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4.11.~4.16.)를 조기에 완료했다.

○ 이어서,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국민(성금)이 함께 참여하여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반영한 이번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다.

《 복구비 지원 : 1,853억 원 》

□ 복구비 1,853억 원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인명 피해와 주택 전·반파, 농·임업·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 원(12.5%),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 원(87.5%)을 지원한다.
- 지역별로는 고성 664억 원(40.7%), 동해 445억 원(24.1%), 강릉 331억 원(18.7%), 속초 219억 원(12.8%), 인제 67억 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 원(11.7%)을 지원한다.
- 부처별로는 산림청 701억 원(37.8%), 문체부 359억 원(19.4%), 행안부 335억 원(18.1%), 환경부 298억 원(16.1%), 국방부 99억 원(5.4%) 순이며, 농식품부 등 그 밖에 부처가 총 61억 원(3.2%)이다.

□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먼저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 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 원을 지원하여 피해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 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여 농민들의 생업 재개에 힘을 신는다.
- 특히,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 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 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 원을 지원한다.

< 지역별 복구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지 자 체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비 고
계	185,296	24,510	160,786	
고 성 군	66,359	8,500	57,859	
속 초 시	21,918	1,539	20,379	
동 해 시	44,450	393	44,057	
강 릉 시	33,095	1,287	31,808	
인 제 군	6,747	64	6,683	
강 원 도	12,727	12,727	-	▸ 사유시설 추가지원

< 부처별 복구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처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비 고
계	185,296	24,510	160,786	
행 정 안 전 부	33,451	20,917	12,534	▸ 주택, 인명
산 림 청	70,106	389	69,717	▸ 산림피해
문화체육관광부	35,906	-	35,906	▸ 관광시설
환 경 부	29,756	-	29,756	▸ 폐기물처리
국 방 부	9,956	-	9,956	▸ 군사시설
교 육 부	1,337	-	1,337	▸ 학교시설
보 건 복 지 부	175	-	175	▸ 사회복지시설
농림축산식품부	3,234	3,141	93	▸ 농·축산물
국 토 교 통 부	1,175	-	1,175	▸ 국도 등
해 양 수 산 부	63	63	-	▸ 어구·어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	30	▸ 통신시설
해 양 경 찰 청	107	-	107	▸ 층혼탐

《 추경예산 지원 : 940억 원 》

-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7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 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추경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를 위해 「범정부 추가경정예산 TF」를 구성하고 추경 관련 주요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한 산불 대응 추경 940억 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 인력뿐만 아니라 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별채, 조립을 실시하고 임도도 개설·정비하는 등 기반을 확충한다.
-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추경예산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지자체의 후속 추경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민성금 배분 : 470억 원 》

- 국민들이 모아 주신 성금 470억 원(4.29. 잠정)은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되며,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가 배분항목·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이재민들에게 성금이 중복 지급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 강원도에서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상당하여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하였고 4월 30일 1차로 173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 긴급 지원된 성금은 우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피해 복구에 사용되며 주택 전과 30백만 원, 반과 15백만 원, 세입자 10백만 원 및 그 밖에 주택 피해자에게도 5백만 원을 각각 배분하였다.
- 아울러, 모집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명 피해자, 소상공인 피해자 등에게도 2차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할 방침이다.
 - 사망자 2명에게는 각 100백만 원, 부상자 1명에게는 20백만 원을 지원하여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 없는 소중한 인명 피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며,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20백만 원을 배분하게 된다.

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 보건복지부에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

- 출산 후 경황이 없는 부모의 편익을 위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각각 의견표명했다.

- A씨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배우자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다보니 경황이 없어 자녀의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73일째 되던 날에야 신청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달 치 양육수당 40만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신청일이 속한 세 번째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이에 A씨는 출산 후 우울증, 병원치료 등으로 경황이 없어 조금 늦게 신청했을 뿐인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경황이 없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월평균 800 여건에 달하는 등 소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점 ▲ 양육수당은 원래 출생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 A씨가 출산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 또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해 해당 자치단체에 A씨의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현행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해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경황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라며,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성화시장, 전통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

- 시장의 특성화 성과에 힘입어, 전통시장 매출 4년 연속 상승세 -

- 전통시장을 변화시키는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간 계속 감소하던 전통시장의 매출이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이후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고객 수, 매출액 변화>

* 고객수(억명) : ('14) 18.0 → ('15) 19.1 → ('16) 19.7 → **('17) 20.0**

* 매출액(조원) : ('05) 27.3 → ('13) 19.9 → ('14) 20.1 → ('15) 21.1 → ('16) 21.8 → **('17) 22.6**

- 이같은 전통시장 매출액의 반전 결과는 지속적인 상인의 자구노력과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개선과 콘텐츠 개발지원 등 정책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성화시장이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매년 고객, 매출이 10%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이 전통시장 특성화를 촉진하는 주효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특성화시장 고객 수, 매출액 변화(문화관광형시장 기준)>

* 전년 대비 매출증감률(%) : ('14) 7.1 → ('15) 10.6 → ('16) 12.9 → **('17) 14.5 → ('18) 16.3**

* 고객수 증감율(%) : ('14) 10.9 → ('15) 12.8 → ('16) 14.3 → **('17) 14.2 → ('18) 14.4**

- 중기부에서 '14년부터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역문화·예술·전통 융합, 서비스향상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 전통시장의 입지, 역량 등에 따라 “첫걸음 → 문광형 → 지역선도 시장” 등 상향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문화, 특산품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시장의 개성과 특징점을 극대화하였으며, '18년말 까지 총 498곳(글로벌·지역선도 23, 문광형 215, 골목형 202, 첫걸음 58)의 전통시장 특성화를 지원하였다(전체 전통시장, 상점가 1,693곳의 29.4%)
 - 최근에는 이마트의 상생스토어 등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특성화시장의 고객,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시장의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등 전통시장의 변화와 활력회복을 견인하는 중요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 당진전통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 전후 : (매출액) 10% 증가 (고객수) 40~50% 증가
- 박영선 장관은 최근 이어지는 전통시장 행보를 통해 시설개선, 주차장 등 하드웨어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특성화사업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또다른 희망을 보았다”면서 “대기업 등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다양한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복합청년몰 조성 확대, 지역특산품 가공·판매지원, 노후건물 디자인 재생 등 다양한 특성화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5월 7일경 2019년 특성화시장 84곳을 선정 발표 예정이다.

진로체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공한다

-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설명회(4.30.) 열려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4월 30일(화),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소외계층 진로체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안내와 함께 체험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소외계층 진로체험교육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요

- ◆ (목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기관 등 소외계층 학생과 청소년들이 더 이상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 도서·벽지 소재 학교, 농어촌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우선 지원
- ◆ (내용)
 - 진로체험버스* :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올해 정부 혁신 역점과제(중점과제)임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진로 특강·상담 제공
 - 대학 진로탐색캠프 : 대학이 농어촌 등 소외지역 중학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제공

- 올해부터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기관까지 운영하고, 대학 진로탐색캠프 참여 대상을 자유학기·학년제 운영학교에서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였다.

- 현재까지 진로체험버스는 50개 기관에서 일반학교 180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 한 곳의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5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진로탐색캠프는 현재까지 **24개 대학***과 **중학교 59개교**가 연결되어, 총 **3,842명의 중학생**이 대학 진로탐색캠프에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 공군사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신규 추가

-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대학 진로탐색캠프)은 작년 학교 밖 청소년기관에 개방된 진로체험망 ‘꿈길’ (www.ggoongil.gakr)에서 원하는 분야와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소외계층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대학 진로탐색캠프를 제공하고 있다.

- 진로체험버스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관들이 참여하여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교에 무료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5년도부터 작년까지 154개 기관에서 5,589개교를 지원하였다.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원격영상기술을 활용하여 전문직업인이 농어촌 등 소외지역 소재 학생에게 진로특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18년까지 전문직업인 601명이 참여하여 7,093개교를 지원하였다.



진로체험버스 : 신안군 섬마을 판검사 난다.
(세계일보, '18.6.19.)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1일 멘토로 나서('18.11.20.)

- 또한, 대학 진로탐색캠프는 국내 유수의 대학이 농어촌 등 소외지역 소재 중학생에게 '16년도부터 '18년까지 24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473개교, 10,244명의 중학생의 진로체험을 지원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진로탐색캠프
('18.9.13~1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진로탐색캠프
('18.7.6.)

-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모든 학생과 청소년들이 더 이상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없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처 제공 관계자들이 서로 진로에 대해 생각을 나누며, 모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9년도 소외계층 진로체험 지원 계획

□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시책 등으로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계층 및 지역간 진로체험 기회 격차 발생
- (추진 근거) 「진로교육법」 제5조, 제18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조례
- (주요 사업) 온·오프라인 통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진로 특강·상담·멘토링 제공,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이 체험프로그램 제공

□ 추진 경과

-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진로체험 기회제공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로드맵에 기초한 소외계층 등 진로교육 지원* 생태계 구축('10~)
 - * 취약·위기, 다문화·탈북 청소년 등 균등한 진로교육 지원, 진로체험지원전산망 서비스 대상 확대, 진로체험의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 등
- 지역 간 체험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13~)
 - * 원격영상멘토링('13~),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15~), 대학 진로탐색캠프('16~) 등
- 국정과제 50-4, “4. 체계적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17~)

□ 2018년 사업 성과

- (진로체험버스) 농어촌 등 1,888개교, 2,189회 수업 운영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농어촌 등 1,737개교, 6,238회 수업 운영
- (대학 진로탐색캠프) 24개 대학, 4,713명 참여

□ 2019년 운영 계획

①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운영

- (멘토가 찾아가는 진로체험) 전문직업 멘토풀을 구축하고, 멘토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이동식 진로체험 프로그램)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을 버스로 방문하여 체험형 법교육 콘텐츠 및 법 관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법무부 협업)
- (현장 방문 진로체험) 정부·민간기관, 대학교, 솔로몬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현장방문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

- (직업인 멘토 참여) 직업군별 전문직업 멘토풀을 구축하여, 학교 및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제공
- (개인 맞춤형 멘토링)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교 및 동아리 단위로 수업 신청 및 개인별 이력 관리 체제 마련
- (학교밖 청소년) 청소년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지원
- (온 오프라인 통합 운영) 전문가의 현장 강연 및 대담을 라이브 방송(유튜브, 페이스북) 및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삶의 경험 공유 등 진로 멘토링 제공

③ 대학 진로탐색 캠프 운영

- (운영 및 질 관리) 24개 대학과 계별 계약 후 캠프 운영 대학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워크숍 실시) 참여대학 관계자 및 참여학교 인솔교사 대상 사업운영, 성과 및 지도 방안 등 연수를 위한 워크숍(3회) 실시
- (교육자료 제작·보급) 안전수칙 등이 강화된 '대학생 멘토 길라잡이' 운영 소책자를 캠프 진행 전 제참여 대학에 제작·배포

붙임2
2019년 대학 진로탐색캠프 참여 대학 현황

구분	대학명	지역	비고
국립(지방거점국립대)	강원대학교	강원 춘천	
국립(지방거점국립대)	경상대학교	경남 진주	
사립	경희대학교	서울 동대문구	
사립	고려대학교	서울 성북구	
국립(특수목적대)	공군사관학교	충북 청주	신규
국립	광주과학기술원	광주 북구	
국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 달성군	
국립(지방거점국립대)	부산대학교	부산 금정구	신규
사립	서강대학교	서울 마포구	
국립법인	서울대학교	서울 관악구	
사립	연세대학교_국제	인천 연수구	
국립(지방거점국립대)	전남대학교	광주 북구	신규
국립(지방거점국립대)	전북대학교	전북 전주	
국립(지방거점국립대)	제주대학교	제주 제주	
국립(지방거점국립대)	충남대학교	대전 유성구	
국립(지방거점국립대)	충북대학교	충북 청주	
사립	포항공과대학교	경북 포항	
국립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유성구	
사립(특수목적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 천안	
국립(특수목적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남 부여	
국립(특수목적대)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송파구	신규
사립(특수목적대)	한국항공대학교	경기 고양	
사립	한양대학교	서울 성동구	
사립	홍익대학교	서울 마포구	

5월 1일부터 4,200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 누구나, 무료로 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5월 1일부터 16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13,000여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확산정책을 추진해 왔다.
-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주민센터·전통시장 등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시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여 연말까지 전국 시내버스 24,000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사업 결과 전국 4,200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2019년 5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 1차 사업 4,200대, 2차 사업 19,800대

- 버스 공공와이파이 홍보스티커(붙임)가 부착된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PublicWifi@Bus_Free_○○○○○” 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하여 접속하면 된다. ○○○○○는 탑승한 버스의 노선번호이다.
- 보안이 강화되고, 속도도 빠른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들은 “PublicWiFi@Bus_Secure_○○○○○”에 접속하면 된다.
- 다만,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강화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전국 4,200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고, 하반기에는 20,000여대 버스에 추가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사업목적

-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편익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추진방식) 정부·지자체가 1:1 매칭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추진(세부노선 등은 지자체가 선정)
- (구축물량) 전국 시내버스 24,000대(1차: 4,200대, 2차: 19,800대)
- (전체예산) 455억원(1차: 77억원, 2차: 378억원)

* 24,000대 구축은 ' 19년 중 완료예정

□ 스티커(11×15cm²)

관광 분야 혁신 창업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통해 89개 사업 최종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가 주관한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결과, 창의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89개 사업이 최종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선정해 관광특화 창업 컨설팅 및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3일(수)부터 2월 27일(수)까지 진행된 공모전 접수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예비창업자/창업 3년 미만 대상) 529건, 관광벤처 부문(창업 3년 이상) 62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 예비관광벤처 70개 기업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 관광벤처의 경우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1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별도심사를 거쳐 2018년 예비관광벤처 중 7개 우수기업이 관광벤처로 승격해 최종적으로는 19개 기업이 선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개별관광객 맞춤형 상품, 이색 관광체험·서비스 제공 사업 선정

최종 선정된 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관광자원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서비스가 전체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개별 소비자 특성이나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재 역시 비중이 높았다. 또한 농촌·생태관광 등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을 보면 ▲ 예비관광벤처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상품’, ‘외국인 대상 전문 탐조관광 상품’ 등이, ▲ 관광벤처에는 ‘가상 현실(VR) 및 드론을 이용한 관광콘텐츠’, ‘방한 관광객 대상 관광 상품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선정된 89개 사업의 대표 중 39세 미만 청년창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49명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 수는 39개로 약 44%를 차지했다. 앞으로 관광벤처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화 자금, 컨설팅·교육,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지원

▲ 선정된 예비관광벤처기업 70곳에는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비 최대 4,000만 원과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19개 관광벤처기업에는 홍보마케팅 지원금 1,050만 원과 투자유치 교육 등을 지원하고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을 수여한다. 또한 예비 및 관광벤처기업은 공통적으로 관광공사 42개 국내외 지사 및 자체 마케팅 경로(채널)를 이용한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을 받는다. 지난 8년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548개 혁신적 관광기업이 발굴되고, 1,76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시점에서 관광벤처기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 상품과 서비스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관광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부문별 선정 결과
2.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 사업 대표 사례

☐ **예비관광벤처부문**

No.	사업제목 및 내용
1	우리는 모두 다이버(We are diver):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O2O 서비스
2	패스파인더(Pathfinder): 신중년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여행 서비스
3	라이브릭(Live Geek): 숨겨진 관광지와 예술가를 홍보하는 라이브 공연미디어 콘텐츠
4	꽃을 활용한 치료요법(플라워테라피; flower therapy)을 제공하는 의료관광 시설
5	리틀스테이(Little Stay): 주말 숙박 교환 플랫폼
6	찾아가는 실감형(3D·가상·증강현실) 관광콘텐츠 체험버스 서비스
7	큐레이티드 코리아(CURATED KOREA): 한식전문가의 음식관광 프로그램
8	소나무 숲에서 놀자: 산림치유-목공체험 복합형 관광 상품
9	제주 한 달 살기 플랫폼 개발
10	소울트립게임: 임무수행 게임(퀘스트 게임)을 응용한 여행체험
11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잎차·쿠키·와인 제조' 체험 프로그램
12	소상공인 중소여행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행 세부항목별 비교견적 플랫폼
13	별 볼 일 있는 세계문화유산 탐방: 인문과학-자연과학 복합 여행 프로그램
14	"문화야 놀자": 박물관 연계 여행 콘텐츠
15	퍼스펙티브 코리아(Perspective Korea): 위치기반의 오디오 여행가이드
16	가즈아제주!: 지도기반 여행 코스 및 일정 계획 수립 어플
17	외국인 대상 전문 탐조관광 상품 개발
18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한국 소도시 자유여행 가이드, so.dosi
19	여행자 여행 이야기 전자책 출판 플랫폼, 디어마이트립(DearMyTrip)
20	마르하반: 방한 중동 여행객 대상 플랫폼 서비스
21	섬 카트 레저체험 제공(The SUM Cart)
22	거제도 마을 복합 여행 프로그램 「잔디밭골:섬새한마을」
23	골목길 여행 기획·안내 제공 서비스(큐레이터)
24	헤이 키도: 자녀 동반여행 콘텐츠 제공 플랫폼
25	고트(Goat)생물원: 지리산 둘레길, 산양과 함께 걷자
26	동화 속 소품을 파는 가게: 여행 소품 대여 서비스
27	지역관광 홍보·브랜드 웹툰 제공
28	관광기념품용 개인 맞춤형 피규어 초고속 제작 및 판매 서비스
29	지역 관광지·명소의 360° 가상(VR)·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영상콘텐츠 제작
30	현지인의 집밥을 체험하는 음식관광 전문 여행 서비스 푸디온
31	종교문화순례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홀리스테이>
32	1,000만 반려인을 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스마트 반려견 여행지 소개서비스' 엔터독
33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장에서의 파티 기획·제공 서비스
34	맞춤형 지역여행 제공 어플 운영
35	안포 어촌부지 내 SF로봇전투체험 관광상품 개발
36	강원여행패스 개발 및 제공
37	무형문화재 매듭장인과 함께하는 개인 맞춤형 이름표 제작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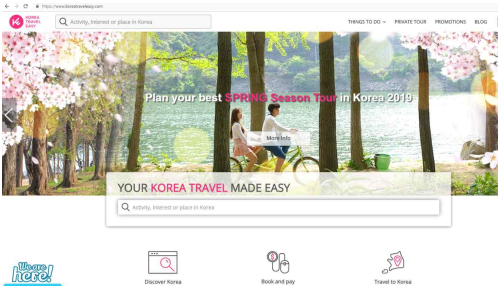
38	환경 친화적 제주 한라산 등반 관광 상품(제로 포인트 트레일; Zero Point Trail)
39	고담시티: 공포체험 여행 프로그램
40	한국의 문화를 입힌 관광기념 상품 제조
41	담양 대나무 빈 공간에 블루투스 스피커와 LED등을 넣은 DIY 관광체험 제품
42	키덜트(Kids+Adult ; 아이 감성·취향을 지닌 어른)를 위한 관광브랜드 개발
43	한국 건축 콘텐츠의 미디어 융합형 전시를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방안 제공
44	부산미식여행 - 2시간에 끝장내는 부산의 모든 먹거리
45	백제 무왕의 꿈 미륵사지와 임금궁: 역사체험 프로그램
46	IT 기반사이버 간절곶 소망우체통 전자엽서 제공 서비스
47	라파영농조합법인: 목장에서 건강한 유청죽육
48	아트로봇팩토리: 재활용품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49	어서와, 반려동물과 한국여행은 처음이지?
50	태국인들을 위한 숙박업 기반의 K-POP 댄스&보컬 및 한국어 교육 관광 캠프
51	제주신화체험여행: 신화를 활용한 여행 콘텐츠
52	新연학·한류탐방 : 중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연예 체험 및 훈련 사업
53	지역 특화 워크숍 여행, 모예
54	여행을, 풀다: 여행 퀴즈 앱
55	여행 동영상 체험공유 서비스 쿨피
56	현지투어 가격비교
57	양방향 O2O 무인 환전장치 및 플랫폼
58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 명소 활성화
59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선 예약 플랫폼
60	자랑스러운 태권도의 가치를 담은 아이디어형 관광기념품 개발
61	세상의 이야기를 담은 캐릭터 그림지도 HMAP
62	HIVE: 여행업계 대상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제공
63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는 새로운 방법: 자동차여행, 무장애관광 상품 제공 등
64	세계 최고(最古)법씨의 고장 청주 소로리마을에서의 치유관광
65	인공지능 챗봇 기반의 외식메뉴 맞춤화 원스톱 서비스
66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여행 상품 및 콘텐츠 제공 사업
67	제철음식을 테마로 하는 미식여행 전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68	곤충과 생태를 이용한 체험제공 및 곤충카드 배틀게임
69	여행객 대상 밴 차량 중개 플랫폼
70	감성을 담은 종이여행지도의 국내외 서비스 개발

※ 기재 순서는 접수 등록 순

□ 관광벤처부문

구분	No.	기업명	사업내용
9회 공모전 선정 기업	1	(주)비글	도시관광 스탬프투어(장소마다 도장을 찍으며 다니는 여행) 플랫폼 임대 서비스
	2	로봇스퀘어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3	(주)아토라이프	해외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의전차량 서비스 플랫폼
	4	데이터킹 주식회사	무인기반 360° 가상현실 관광콘텐츠 체험
	5	코리아트래블이지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한국여행상품 온라인 예약, 결제 서비스
	6	(주)비씨디이엔씨	특허기반 360° 가상현실(VR)드론을 활용한 해양관광 가상현실 전망대 콘텐츠 제작·보급사업
	7	서프홀릭	해양스포츠(서핑; Surfing) 기반의 해양체험관광 및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8	코스웬 콘텐츠 주식회사	밀레니얼세대 국내·외 여행객에 특화된 캐릭터 활용 맞춤형 여행 서비스 제공
	9	(주)공감씨즈	게스트하우스를 거점으로 한 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사업
	10	주식회사 트래스코	외래관광객 대상 맞춤형 차량이동 서비스
	11	(주)샤뽀	시대별 모자 역사·제작체험 프로그램 제공
	12	주식회사 다자요	유희자원(빈집, 폐가)을 활용한 빈 집 프로젝트
2018 예비 관광 벤처 → 2019 관광 벤처 기업 승격	13	곰세마리 양조장 주식회사	각 지역 및 계절별 생산되는 꿀을 활용한 술 제조 체험관광
	14	베러먼데이	1950년대 쌀 창고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근대역사 공간을 복합 문화관광단지로 재해석
	15	베러앤모어	B2B(기업 간 전자 상거래) 호텔 예약 플랫폼
	16	우시산	울산 고래디자인 캐릭터 활용 이벤트 및 관광 상품 개발
	17	유니크굿컴퍼니	장소와 이야기를 연계한 과제를 수행하며 관광지를 체험하는 여행상품
	18	캐리	집으로부터의 해방, 숙소에서 공항까지 여행객 짐 배송 서비스
	19	햇초고	국내외 여행일정 최적화 경로 정리 및 일정 공유 앱

※ 기재 순서는 공모전 선정 기업은 접수 등록 순, 승격 기업은 가나다 순

	[예비관광벤처부문] 펫에어라인 (대표: 이형대) 어서와, 반려동물과 한국여행은 처음이지? ○ 반려동물 동반 한국여행 플랫폼 ○ 국내외 반려동물 가구 급증 추세에 대응, 동물의 단순 수송서비스에서 벗어나 반려동물과 함께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 및 서비스 제공 ○ 구미주 반려동물 인구를 1차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 향후 국내·외 단체여행 등으로 확대 예정
	[예비관광벤처부문] 탐조관광 (대표: 이주은) 전 세계 새 관심층에게 한국의 희귀새를 소개합니다 ○ 국내 최초 외국인대상 전문 탐조관광 서비스 사업 ○ 구미주 지역에서 이미 특수목적관광(SIT)의 일환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한 탐조관광(Bird Watching)과 관련하여 국내 방한관광 상품개발 ○ 소수인원, 전문해설 및 가격정책을 통한 고부가가치 여행상품 구성 가능
	[관광벤처부문] 비씨디이엔씨 (대표: 이희윤) 대한민국 3면의 바다를 가상현실(VR)로 즐기자! ○ 특허기반 360° 가상현실(VR) 드론을 활용한 해양관광 VR 콘텐츠 제작 및 보급사업 ○ 국내외 최초 개발 무진동 360° VR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 + VR 관광콘텐츠 선도 ○ 실감나고 볼 맛있는 VR영상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진에 기여 예정
	[관광벤처부문] 코리아트래블이지 (대표: 배상은) 해외 OTA 대항마, 토종 여행예약 플랫폼이 간다! ○ 방한 개별관광객 대상 한국 여행상품 온라인 예약, 결제 플랫폼 ○ 24시간 고객 상담, 콘텐츠 다양화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고객(여행예약자) 만족도 제고 ○ 아마존(amazon), 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지불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해외소비자 대상 편의 제고

7

농림축산식품부

봄 여행주간, 강원도 농촌관광 어떠세요?

-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농촌관광객에 혜택 풍성 -

《 주 요 내 용 》

◆ 봄 농촌여행주간(4.27~5.12) 동안 농촌여행지 방문객 대상 체험, 식사, 숙박 10~30% 할인과 다양한 기획행사(이벤트) 실시

○ (할인행사) 총 117개소(농촌체험휴양마을 105개소, 교육농장 7, 농가맛집 3, 농촌테마공원 1, 6차산업인증업체 1)

○ (이벤트) 여행주간 연계 농촌여행 기획행사(이벤트) 실시

- 여행주간 내 '농촌여행 스탬프투어' 참여자 100명에게 더블 포인트 지급

- 웰촌 포털을 방문하여 여행지 추천 시 77명에게 경품 지급

◆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5월)

○ 여행사 연계 농촌여행상품으로 피해지역(속초, 강릉, 동해, 고성, 인제) 농촌관광 시 여행사에 체험·식사·숙박비 지원을 상향 (80% → 100) 지원

※ 최대 지원한도액 : (체험) 7천 원 / 인, (체험+식사) 12, (체험+식사+숙박) 25

○ 웰촌에서는 5월 한달 간 강원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매주 주말 “온 국민이 다같이(가치) 행복한 商想(상상)여행-만원의 행복” 상품 4종 운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10:30 강릉역 출발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등 → 18:30 강릉역 도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봄 여행철을 맞아 증가하는 여행 수요를 농촌관광지로 유도하기 위하여 문체부 주관 봄

여행주간과 연계하여 '봄 농촌여행주간('19.4.27~5.12)'을 운영한다

- 이번 봄 농촌여행주간에 전국 117개 농촌여행지(농촌체험휴양마을 105개소, 교육농장 7, 농가맛집 3, 농촌테마공원 1, 6차산업인증업체 1)에 방문하는 농촌관광객은 10~30% 할인 받은 비용으로 체험, 식사, 숙박을 즐길 수 있다.

- 특히,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 관광객까지 감소함에 따라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객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섰다.

- 그동안 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하던 내국인 대상 농촌여행 상품의 체험, 식사, 숙박에 대한 여행사 지원율(80%)을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농촌여행지(속초, 강릉, 동해, 인제, 고성)가 포함되는 경우 100% 모두 지원 해주기로 했다.(5월 한달간)

- 또한, 웰촌포털에서 운영하는 농촌여행상품 중 산불피해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4개소) 방문 상품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다같이(가치) 행복한 商想(상상)여행-만원의 행복”을 진행한다.

- 5월 한달 동안 매주 토·일요일 10:30분 강릉역을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체험과 식사를 하고 인근
관광지 또는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행사(이벤트)도 준비 했다.

○ (스탬프투어 더블포인트) 봄 여행주간 동안 ‘농촌여행 스탬프
투어’ 참가자 선착순 100명에게 스탬프투어 여행지에서 현금
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두배로 부여하고,

○ (농촌여행지 추천 이벤트) 웰촌 포털을 방문하여 주제별 여행지 3개소를
추천하면 77명을 추천하여 기프트권(1만 원)을 증정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조재호 농촌정책국장은 나들이 하기 좋은 봄 여행주간에
해외나 유명 관광지만 찾지 말고 인근의 농촌여행지도 많이 찾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봄 농촌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 특히,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으로 여행 가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자원봉사 못지않은 또 다른 봉사라고 생각
하시고 많이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봄 농촌여행주간 내 할인 농촌여행지와 이벤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여행 종합포털인 ‘웰촌 포털(www.welchon.com)을
방문하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1 2019 농촌여행 스탬프투어 여행지(92개소)

☐ 여행지 현황

○ 농촌체험휴양마을 82개소, 6차산업 인증기업 9, 우수 관광농원 1

* 계속 운영 39개소(체험마을 35, 6차산업 4), 신규 53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92	14	19	5	16	4	10	9	14	1
체험마을	82	9	18	5	15	3	10	8	13	1
융복합산업	9	5	1		1	1		1		
관광농원	1								1	

시도	2019 스탬프투어 여행지(92선)
인천/경기 (14)	(계양) 두리버섯농촌교육농장 (강화) 도래미마을 (가평) 초롱이동지마을 (안성) 인처굴마을, 서일농원 (양평) 뚝탄지마을 (연천) 새동지마을, 푸르내마을, 조선왕가 (이천) 서경들마을 (파주) 산머루마을, 디엠제트드림푸드 , 산머루농원(영)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강원 (19)	(양구) 오미마을 (양양) 향릉마을 (영월)유전리삼굿마을 (원주) 삼송마을, 섬강매향골마을, 성황림 마을, 돼지문화원 (인제) 마의태자권역마을, 미산1리 고로쇠마을, 하추리산촌마을 (정선) 개미들체험마을, 덕우리체험마을 (철원) 천지자연마을 (평창)약초마을, 여름치마을 (횡성)고라데이마을, 백로마을, 봉화마을, 횡성 산채마을
충북 (5)	(단양) 방곡도개비마을, 한드미마을 (증평) 삼기조아유마을 (진천) 물안뜰마을 (충주)추평호산뜰애마을
대전/충남 (16)	(종구) 무수천하마을 (금산) 닥실마을, 수통1리마을, 조팝꽃피는마을 (부여) 구례울체험마을, 송죽체험마을 (서천)동백꽃마을, 동자북문화역사마을 (아산) 외암마을 (청양) 가파마을, 꽃뫼마을, 바둑골마을, 알프스마을 (태안) 매화뚝방마을, 벚가리체험마을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전북 (9)	(김제) 사방외갓집마을 (남원) 달오름마을 (무주) 명천물숲마을, 솔다박마을 (부안) 산들바다마을 (완주)창포마을, 경천애인(영) (임실) 임실 치즈마을 (정읍) 태산선비마을
전남 (14)	(강진) 녹향월촌마을 (곡성) 가정마을 (광양) 도선국사마을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나주) 명하쪽빛 에코왕국체험마을 (담양)달빛무월마을, 운수대통마을, 담양도래수마을 (무안) 월선체험휴양 (순천) 순천꽃마차마을, 순천용오름마을 (여수) 안포씨마을 (진도) 길은마을
경북 (4)	(고령) 개실마을 (구미) 쫄새마을 (상주) 승곡마을 (영천) We와이너리
경남 (10)	(거제) 삼거동체험마을 (거창) 빙기실마을, 수승대마을, 숲옛마을 (고성) 청광새들녘 (남해)남해강변마루마을 (사천) 우천바리안마을 (진주) 가뫼골체험마을 (창원) 빛돌배기마을 (하동) 의신베어빌리지
제주(1)	(서귀포) 신흥2리 제주동백마을

* (검정) 농촌체험휴양마을 82개소, (빨강)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업 9, (파랑) 관광농원 1

참고2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원상품 운영 개요

□ 민간여행사 연계상품 운영

- 운영기간 : 5. 1(수) ~ 5. 31(금)
- 지원내용 : 농촌관광지 내 지출액(체험, 식사, 숙박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상향(80% → 100)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비고
농촌관광지 내 지출액 지원 (80% → 100)	체험 : 최대 7천원/인 지원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연계* 시 지원한도 각 2천원 상향
	체험·식사 : 최대 12천원/인 지원	
	체험(식사)·숙박 : 최대 25천원/인 지원	

* ① '18 계절테마별 농촌여행지로 선정된 마을 상품 운영 ② '19 농촌여행 스탬프투어 마을 상품 운영 ③ '19 지역단위 농촌관광 프로그램 이용

- 지원공고 : 웰촌 홈페이지(www.welchon.com), 한국여행업협회(KATA) 홈페이지

□ “만원의 행복” 상품 운영

- 운영기간 : 5. 4(토) ~ 5. 26(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당일 여행

- 상품가격 : 10,000원 (1만원권 강원사랑상품권 제공)
- 여행코스 : 강릉역 → 농촌체험휴양마을 → 전통시장 → 강릉역
- 상품종수(운영횟수) : 4종(8회)

방문일자	방문마을	모집인원
5.4(토), 5.18(토)	(강릉) 농심향수에 취하는 시간여행 “한울타리마을”	40명
5.5(일), 5.19(일)	(강릉) 자연가득 감성여행 “소금강마을”	40명
5.11(토), 5.25(토)	(강릉) 쑥떡쑥떡 정감가득 농심여행 “정감이마을”	40명
5.12(일), 5.26(일)	(속초) 자연에 취하는 향기여행 “하도문쌈마을”	40명

8

환경부

전국을 누비는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 본격 운영

- 전국 국립공원 주요 행사와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안내소 -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찾아가는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4월 시범운영을 끝낸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는 특수차량으로 길이 9,920mm 넓이 2,470mm 높이 3,510mm이며, 가격은 2억 8,300만 원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교육 수요가 많고 지리적으로 중부권에 위치한 계룡산국립공원에 이동탐방안내소를 기본적으로 배치한다.
- 앞으로는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행사와 계룡산 주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동탐방안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이동탐방안내소 내부에는 국립공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기가 설치됐다.
- 아울러 내부에 크로마키사진관이 구성되어 있어 국립공원의 비경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 ※ 크로마키(Chroma key): 색상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피사체를 다른 화면에 합성하는 텔레비전 화면 합성 기법
- 국립공원공단은 이동탐방안내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나 격오지에 사는

학생 등 국립공원을 방문하기 힘든 국민들을 상대로 국립공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임영재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 이동탐방안내소는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국립공원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며, “이동탐방안내소의 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립공원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 제원.
2. 관련사진(시범운영 현황).
3. 2019년 이동탐방안내소 운영 계획.
4. 질의응답 끝.

※ 관련 영상 및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붙임1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 제원

1 추진 배경

- 공원별 탐방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국민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탐방안내소' 도입

차량 규격

차종	전장(m)	전 폭(m)	전 고(m)	탑승인원
5톤 트럭	9.9	2.5	3.5	3명



- ※ 공간구성(4개 콘텐츠 구성) : 주요 자원 등 공원소개, 우수경관 간접체험(VR체험), 3차원 해설 가상체험(AR체험), 가상스튜디오(사진촬영)

2 운영 계획

- 운영방향 :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연간 16만명 이용 예상)

- [체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주요행사 등 지원
 - 공원 인근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장, 성수기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 배치하여 탐방서비스 제공

구 분	봄, 가을, 겨울	여름
지원내용	지역 축제, 전시회 등 주요행사	해변 및 야영장 입구

- [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행사 지원이 없는 기간에 상시 운영)
 - 숲(바다)유치원, 방과후 학교, 자유학년제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농산어촌 등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 ※ 행사 지원 및 교육 계획이 없는 주중에는 환경교육, 주말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배치하여 탐방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차량배치: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수요적 측면] 도심권에 위치하여, 환경교육 등 상시 수요가 많음
 - [지리적 측면] 중부권에 위치하여 공원별 주요 행사에 차량지원 유리

붙임2

관련사진(시범운영 현황)



붙임3

2019년 이동탐방안내소 운영 계획

○ 국립공원사무소 행사 운영 계획

신청 순서	기관명	희망 참가일 (최대 3일 가능)	참여 인원	연령대	참가 목적	행사 유형	비고
1	무등산생태 탐방원	2019. 4. 19.(금)	약 150명	7세 이하	교육 · 홍보	환경교육	
		2019. 5. 24.(금)	약 200명	7세 이하			
		2019. 6. 7.(금)	약 30명	20~50대			
2	지리산전남	2019. 4. 20.(토)	약 500명	전 연령	국립공원 홍보	지리산 남악제	
3	경주	2019. 6. 1.(토)	약 3,000명	전 연령	축제 시너지	환경축제	
4	내장산	2019. 4. 6.(토)~7.(일)	약 3,000명	전 연령	축제 시너지	벚꽃축제	
5	소백산	2019. 5. 25.(토)~26.(일)	약 700명	전 연령	축제 시너지	철쭉축제	
		2019. 10. 26.(토)	약 1,000명	전 연령	축제 시너지	사과축제	
6	월악산	2019. 5. 5.(일)~6.(월)	약 1,000명	전 연령	국립공원 홍보	봄 주간행사	
		2019. 10. 19.(토)~20.(일)		전 연령	국립공원 홍보	가을 주간행사	
7	속리산	2019. 11. 2.(토)~ 3.(일)	약 2,000명	전 연령	축제 시너지	지역축제	
8	가야산	2019. 9. 7.(토)~8.(일)	약 2만명	전 연령	축제 시너지	지역 문화행사	
9	계룡산	2019. 4. 13.(토)~14.(일)	약 1,000여	전연령	축제 시너지	벚꽃축제	
		2019. 4. 27.(토)~28.(일)	약 1,000여	전연령	축제 시너지	지역축제	
10	태백산	2019. 7. 20.(토)~4.(일) 中 3일	약 3,000명	전 연령	축제 시너지	지역축제	
		2019. 4. 10.(수)~11.(목)	약 100명	7세 이하 초등학생	교육 · 홍보	환경교육	
11	북한산도봉	2019. 5. 11.(토)~12.(일)	약 2,500명	초등학생~ 60대이상	국립공원 홍보	봄 주간행사	
		2019. 9. 28.(토)	약 1,000명	초등학생~ 60대이상	국립공원 홍보	가을 주간행사	
		2019. 9. 29.(일)	약 1,000명	30대~60대	축제 시너지	도봉산 페스티벌	
12	본부	2019. 5. 4.(토)	약 1,000명	전 연령	국립공원 홍보	국립공원의 날	

※ 계룡산 주변 초등학교 환경교육은 5월 24일 까지 참가 접수 예정이며, 6월부터 운영예정 임

붙임4

질의응답

1.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 VR기기 : 13개 국립공원의 주요 명승지를 가보지 않고 둘러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제작하였습니다.
- AR기기 : 경주국립공원의 주요 문화재 7개에 대해 3차원 가상해설을 진행합니다.
- 크로마키사진관 :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경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즉석으로 사진을 제공합니다.
- 영상관 : 국립공원 깃대종, 환경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동탐방안내소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 국립공원사무소에서만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계룡산 인근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인근 행사장에 이동탐방안내소가 있으면 별다른 신청서 없이 순번대기표를 받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행사장의 경우 보통 11시~17시까지이며, 대기시간은 보통 5~30분 정도입니다.
- 앞으로 국립공원인근 지역축제 외에도 국립공원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9

고용노동부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지속 증가

-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 -

□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6,995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 오른 2.78%로 최근 지속 증가하였다.**<참고 1. 의무고용 현황>

*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 / 상시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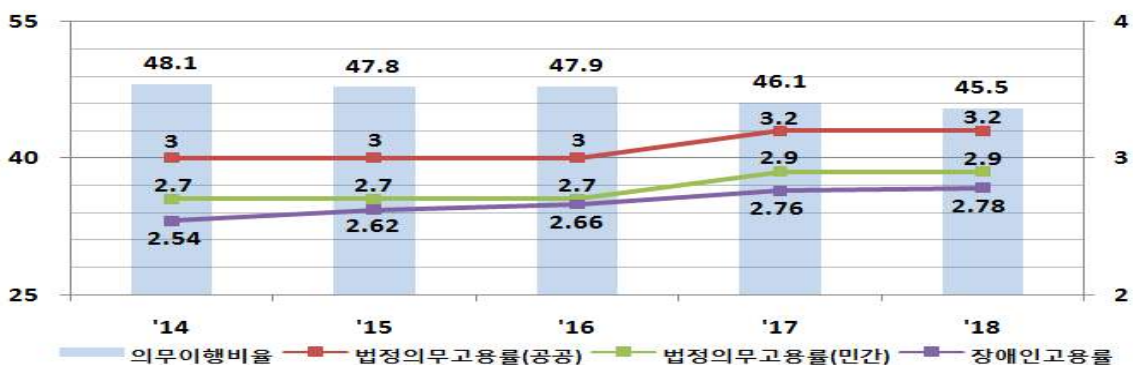
** (2014) 2.54% → (2015) 2.62% → (2016) 2.66% → (2017) 2.76% → (2018) 2.78%

○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이 증가하였으나,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 (공공) 2014~17년 연평균 24만명 증가 < 2018년 전년대비 11.7만명 증가(연평균의 4.83배)

(민간) 2014~17년 연평균 9만명 증가 < 2018년 전년대비 14.7만명 증가(연평균의 1.64배)

<그림1> 법정의무고용률, 의무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



○ 한편, 의무고용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48,113명으로 26.7%를 차지해, 상시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중증 비율 20.6%(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0.6%p 낮아졌다.

* 의무고용 이행비율 =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수 /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수

** (2014) 48.1% → (2015) 47.8% → (2016) 47.9% → (2017) 46.1% → (2018) 45.5%

○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50~99인 민간기업(14,407개소) : 의무고용 사업체의 49.6%, 이행비율 40.5%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경우 24,615명을 고용하여 고용률은 2.78%로 전년과 비교하여 0.10%p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 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았는데,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 되었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 특정직군에 의무고용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일부(경찰·소방·군인 등)를 제외한 공공·민간 전 부문에 의무고용을 적용토록 법 개정

○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2.9%)은 14,246명을 고용,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p 낮아졌는데, 장애인 고용 증가(1,561명)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p 높아졌는데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1,838명)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1,422명(77%)

- 의무이행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으나 기타공공기관(37.6%)과 출자출연기관(37.4%)은 여전히 저조하다.

* ▲(기타공공기관) 연구원, 대학병원, 중소기업은행 등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 문화재단 등

-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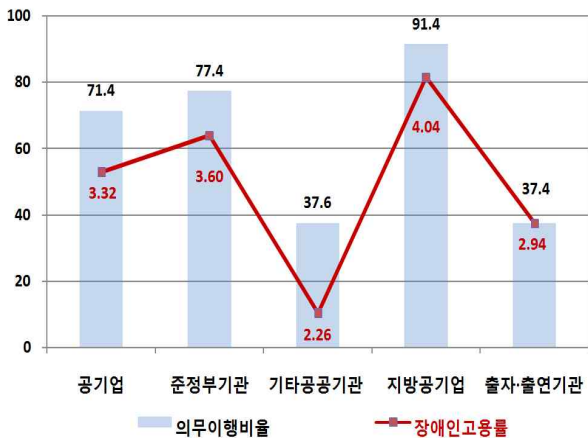
-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지속되었다.

*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5,371명) 중 1,000인 이상 기업 3,941명(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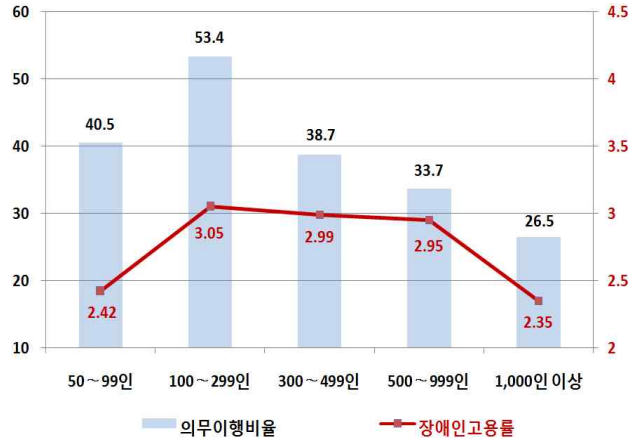
** (고용률) 100~299인 3.05%, 300~499인 2.99%, 500~999인 2.95%, 1,000인 이상 2.35%

(이행비율) 100~299인 53.4%, 300~499인 38.7%, 500~999인 33.7%, 1,000인 이상 26.5%

<그림2> 공공기관 부문별 이행비율·고용률



<그림3> 민간기업 규모별 이행비율·고용률



□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

-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의 고용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여부 점검
- 대기업의 의무이행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영리법인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등 입법을 추진
- 장애인화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인사관리, 시설·장비, 편의제공 등 장애인 고용 컨설팅에 활용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의 고용 개선을 위해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특히,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하여 아쉬운
점이다.”라고 밝혔다.

* ▲(프랑스) 임용시험에 탈락해도 기간제교사로 채용 후 평가에 따라 정식교원 임용 ▲
(일본) 장애인 교원 양성대학 별도 설립

- 아울러,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 “단순한 장애인 구분모집을 넘어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원 직종 개발과 양성제도 개편 등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붙임1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표

(단위: 개소, 명, %, %p)

구 분			2017년 12월 (A)				2018년 12월 (B)				증 감 (B-A)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합 계			28,018	7,912,772	218,441 (175,935)	2.76	29,018	8,177,401	226,995 (180,328)	2.78	8,554 (4,393)	0.02
정부 부 문	공 무 원	소 계	314	861,388	24,831 (21,531)	2.88	314	885,727	24,615 (21,207)	2.78	▼216 (▼324)	▼0.10
		중앙행정기관	50	171,995	5,974 (5,107)	3.47	50	176,790	6,067 (5,184)	3.43	93 (77)	▼0.04
		헌법기관	4	26,778	652 (582)	2.43	4	26,866	654 (578)	2.43	2 (▼4)	-
		지방자치단체	243	269,105	10,982 (9,450)	4.08	243	279,266	11,043 (9,412)	3.95	61 (▼38)	▼0.13
		교 육 청	17	393,510	7,223 (6,392)	1.84	17	402,805	6,851 (6,033)	1.70	▼372 (▼359)	▼0.14
	근 로 자	소 계	295	275,087	12,685 (9,104)	4.61	302	329,543	14,246 (10,284)	4.32	1,561 (1,180)	▼0.29
		중앙행정기관	34	44,513	1,173 (953)	2.64	39	63,660	1,672 (1,410)	2.63	499 (457)	▼0.01
		헌법기관	3	1,364	55 (45)	4.03	3	2,065	61 (53)	2.95	6 (8)	▼1.08
		지방자치단체	241	86,496	7,135 (5,418)	8.25	243	103,768	7,454 (5,543)	7.18	319 (125)	▼1.07
		교 육 청	17	142,714	4,322 (2,688)	3.03	17	160,050	5,059 (3,278)	3.16	737 (590)	0.13
공공 기 관	소 계	소 계	625	458,031	13,853 (12,131)	3.02	652	496,579	15,691 (13,564)	3.16	1,838 (1,433)	0.14
		공기업	35	128,729	3,956 (3,645)	3.07	35	138,727	4,611 (4,204)	3.32	655 (559)	0.25
		준정부기관	88	99,146	3,372 (2,942)	3.40	93	115,093	4,139 (3,484)	3.60	767 (542)	0.20
		기타공공기관	184	133,026	3,118 (2,580)	2.34	189	139,767	3,156 (2,634)	2.26	38 (54)	▼0.08
		지방공기업	137	65,970	2,669 (2,331)	4.05	140	69,178	2,792 (2,432)	4.04	123 (101)	▼0.01
		출자·출연기관	181	31,160	738 (633)	2.37	195	33,814	993 (810)	2.94	255 (177)	0.57
		출자·출연기관	181	31,160	738 (633)	2.37	195	33,814	993 (810)	2.94	255 (177)	0.57
민간 기 업	소 계	소 계	26,784	6,318,266	167,072 (133,169)	2.64	27,750	6,465,552	172,443 (135,273)	2.67	5,371 (2,104)	0.03
		100인 미만	13,624	957,667	24,371 (18,747)	2.54	14,407	1,011,487	24,432 (18,703)	2.42	61 (▼44)	▼0.12
		100~299인	9,715	1,586,917	48,917 (38,895)	3.08	9,956	1,633,215	49,801 (39,137)	3.05	884 (242)	▼0.03
		300~499인	1,635	620,965	18,048 (14,306)	2.91	1,542	587,850	17,582 (13,787)	2.99	▼466 (▼519)	0.08
		500~999인	1,090	750,865	21,557 (17,597)	2.87	1,108	764,177	22,508 (17,885)	2.95	951 (288)	0.08
		1,000인 이상	720	2,401,852	54,179 (43,624)	2.26	737	2,468,823	58,120 (45,761)	2.35	3,941 (2,137)	0.09
		대기업집단	652	1,247,775	25,714 (21,316)	2.06	698	1,297,088	27,737 (22,393)	2.14	2,023 (1,077)	0.08

* ()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붙임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의무고용제도 개요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

-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 적용대상		'08	'09	'10~'11	'12~'13	'14~'16	'17~'18	'19~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2.0%	3.0%				3.2%	3.4%
	근로자	미적용		2.3%	2.5%	2.7%	2.9%	
공공기관	공기업	2.0%		3.0%		3.0%	3.2%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3%	2.5%	3.0%	3.2%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2.7%	2.9%	3.1%

-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6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 부담금: 1인당 월 104.8만원~174.5만원

10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

<주요 추진과제>

① 아동학대 예방 강화

- ▲ (채용·교육) 인·적성 검사 도입, 사례 중심 교육 및 현장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 ▲ (부모 참여 돌봄)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근태 및 활동 이력 공개, 부모에 의한 '실시간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실시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부터 설치에 관한 충분한 안내 및 사전 동의여부 확인, 동의하는 아이돌보미를 영아 서비스에 우선 파견
- ▲ (처벌) 학대 의심사안 발생 시 즉각 활동 정지, 자격 정지 강화(6개월→2년), 보호처분·기소유예 시에도 5년 간 활동 배제

② 공공관리체계 강화

- ▲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검토) 중앙단위 서비스 품질 균질화를 위한 총괄 지원기관 지정 추진
- ▲ (근로여건 개선)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치유 지원 등 스트레스 관리, 자격제도 도입검토 등 자격관리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금)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4번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차례의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전담 조직)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특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등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인·적성검사 시행, 교육체계 강화, 처벌 강화 등 공통된 요구사항 및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였다.

- 이번 대책은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였다.
- 특히,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까지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발 시 검증 및 교육 강화

-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하여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제도 전면 개편하여,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하여
△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교육 과정별로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고, 기관 간 강사 정보 공유 및 강사 대상 사업 이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강사의 질을 제고한다.

2.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 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올해 안에 개발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 모니터링(점검)과 관련하여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 현재 서비스 이용 서약서 상에 ‘아이돌보미 사전고지’로만 규정되어있는 지침을 보완하여, 이용가정이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할 필요성,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

-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4월 8일(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화)까지 운영하여 은폐된 아동학대 사건이 없도록 한다.
-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는 온라인에서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참여마당 >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6월 30일(화)까지 이용할 수 있다.
-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하여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신속한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직무교육 시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 절차,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하여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가정 내 1:1 서비스로 같은 공간 내 감독자가 없다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 여성가족부는 이를 금년 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4. 공공관리체계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거점기관은 시도별 아이돌보미 수급 계획 및 상황을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이 아이돌보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수를 가늠하는 한편,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신청, 아이돌보미 퇴사 처리 등의 업무를 전자화한다.
- 또한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의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여부 검토를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추진도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피로 누적 및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20년부터는 매년 우수 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여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 위해요소, 안전관리 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매뉴얼(방침)을 마련하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상호 준수해야 할 ‘수칙’도 마련하여 배포한다.

□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라며,

-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추진시기
I.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	
1. 인·적성검사 도입	'19.5월~
2. 면접 검증 강화	'19.6월~
3. 교재 개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19.5월~
4. 현장실습 확대, 소규모 교육 등 교육방식 개편	'20.1월~
5. 아이돌보미 간 정보교환, 사례공유	'19.7월~
6. 전문강사 풀 구축	'19.5월~
II.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1.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활동내역 관리	'20.1월~
2.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제 도입	'20.1월~
3. 모니터링 항목 개편 및 이용자 사전 신청제 도입	'19.7월~
4. 방문모니터링 비중 확대 등 모니터링 내실화	'20.1월~
5.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동의제 도입, 사전고지 안내 강화	'19.7월~
III.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	
1.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19. 4~6월
2. 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대처 교육 강화	'20.1월~
3. 아동학대 대처 요령 구체화	'19.6월~
4. 신고 처리절차 개선	'19.7월~
5. 학대 피해 아동 치유지원 등 사후관리	'19.6월~
6.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강화	'20.1월~
IV. 공공관리체계 강화	
1.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검토(중·장기)	'20년 이후
2.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분석	'20.1월~
3. 행정업무 전자화	'20.1월~
4.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 검토(중·장기)	'20년 이후
5. 치유프로그램 지원	'19.7월~
6. 우수 아이돌보미 포상	'20.1월~
7.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20.1월~
8. 신뢰 회복 수칙 배포	'19.10월~

11

국토교통부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 서울-울릉 간 7시간→1시간...지역민 생활권역 확대·관광활성화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5월 1일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월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
-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 그간,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나 울릉도의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유찰된 바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질조사 및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과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으로 사업비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암석 조달방법 변경,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

였고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6,633억 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다.

- 또한,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위해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전담반 회의를 지속 실시(18년 2월~12월)하여 협의점을 도출하였고 지난 4월초 공역위원회에서 항로 신설이 최종 의결되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왔다.

-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해양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 문제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회장 정경호)도 “울릉도는 육지를 오가는 험한 바닷길로 인해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사업 본격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달 초 입찰공고가 시작되고 이후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여 지난 2007년 도입한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발주청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5. 1. ~ 31.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하여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 이탈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 불빛을 따르는 오징어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채낚기어선이 불빛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면서 대량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말하며, 오징어 자원 고갈을 초래함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 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일정기간내 수리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 해당 기간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등을 위한 『'19년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 단속』 계획을 보고 드림

- 어업인 준법조업 등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활동 병행 -
※ '80년 이후 매년 2회(5월, 10월) 정례적으로 집중단속 실시 중

□ 추진배경

-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및 홍보 등으로 불법어업은 감소한 반면, 최근 무허가 조업·무면허 양식어업은 지속되는 상황*

* 무허가·무면허 단속실적 : ('15) 342 → ('16) 349 → ('17) 342 → ('18) 368

-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등 위반행위가 여전하고, 어구 초과부설, 선형·어구변형, 금지구역 위반 등 복잡 다양화

⇒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집중단속 및 대국민 홍보 필요

□ 전국 일제 합동단속 계획

- (기간/주관) 2019. 5. 1~ 31(1개월)/해양수산부
- (참여)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중앙회/(협조) 법무부, 해경
- (단속방법) 단속거점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지도선 50여척, 인원 95명), 국가·지방 교차승선 등을 통해 해상 및 육상에서 입체적 단속

* 어업인의 어선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형태로 참여시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 병행

- (중점단속) (국내)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어린물고기 포획 등
(국외)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

*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3명을 편성, 유통·판매행위 단속

□ 향후 추진계획

- 대국민 홍보 포스터, 현수막 제작 및 배부(해수부/1,800부)
-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수협, 어업관리단)

붙임2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 포스터



2019. 05. 01.~31.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개요 산란기 어획량 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5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단속기관 주관_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 참여_지자체, 수협중앙회 | 협조_법무부(대검찰청), 해양경찰청

중점단속대상 공 물_무허가, 선형 어구변형, 포획금지체장 어구사용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조업구역, 불법어획물·포획 운반·소지·판매, 「어선법」 위반 어선위법신장치 미작동·미수리(과태료 300만 원 이하, '18년 5월 1일 시행)
동해안_소형가선저인망(고대구리) 불법조업, 쌍끌이저인망 열치 포획, 잠수기 불법어구 사용, 2종이상 자망 사용승인 기간 미준수 등
서해안_연근해자망(돛자망), 안강망 및 통발 어구초과 사용, 어린돌고기 포획, 변형어구사용 위반 등
남해안_중·대형저인망 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 외 어구사용, 대형선망 및 근해안강망 금지구역 침범위반 등

신고 및 문의 대표전화_국번 없이 1588-5119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_www.mot.go.kr | 지방자치단체_불법어업단속 담당부서
홍·사·남해어업관리단_부산 051-410-1030-3 / 목포 061-240-7970-3 / 제주 064-780-2421-4

해양수산부

봄철 불법어업 근절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 : 2019년 5월 1일~5월 31일(1개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